

# 탈원전 복원·원전생태계 정상화·수출총력, 핵심정책 ‘의지’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첫 현장행보  
서울원전·부산신항 잇따라 방문  
“안전 최우선 원칙 철저히 지켜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서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각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 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기 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

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 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마·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김동철호, 전기요금 정상화·재무구조 개선 ‘과제’… 환골탈태 경영예고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취임  
빠 끄는 경영혁신·내부개혁 필요  
‘생존을 위한 변화’ 수 없이 강조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전 스스로의 냉정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수장의 자리를 채웠다. 20일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제2의 창사’를 각오를 내비치며 한전 구성원에게 기존의 구조와 틀을 과감히 벗어던질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4분기(10~



20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김동철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

12월) 전기요금 결정과 부채와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을 정상화 과제 해결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사장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수도 없이 강조하며 변화의 핵심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를 꼽았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거둔 41조2165억의 매출 중 93.7%가 전기판매수익이다. 김 사장은 매출액의 90% 이상을 전력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에 앞서 한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

금 정상화는 더욱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우리의 빠른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유가 등이 전력생산 비용에 반영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니 만큼 물가안정 차원에서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바라보는 기대감과는 먼 주장이다.

현재 한전 부채는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4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를 기록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92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2%가 늘어나 재무구조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김 사장도 지난 2021년 이후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6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 201조원의 총부채 등을 거론하며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채 발행도 한계에 왔다”며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가를 밀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무역 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전은 당초 전량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내년에만 6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경제계 “韓기업 규제, G7보다 높아”

대기업 집단 제도 등 규제 개선 시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해 국내 기업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

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날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기업집단 규제 재정비 ▲법인세 단순화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OECD, G7 등 경쟁국 대비 차별적인 규제 환경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G7보다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

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허용(1998년) 이후,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채비율 규제, 증손회사 규제,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를 시행중이다. G5 국가들은 주로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 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푸드테크 활용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 1면 ‘화학에 헬스·바비오’서 계속

과학기술 융합해 식품영역 개척

그렇다고 기존 주력사업인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당장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 프리미엄 소형물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그랜드 오픈한다. 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사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사업 확장 및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롯데그룹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이른바 ‘양손잡이(ambidextrous) 조직’으로 거듭 난다는 복안이다.

삼양식품그룹은 그룹과 지주사 CI를 ‘삼양다운드스퀘어’로 바꾸고 음식문화

와 과학기술을 서로 융합해 새로운 식품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삼양다운드스퀘어는 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글로벌 체제를 가속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삼양스퀘어랩을 통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삼양다운드힐(전 삼양목장)에서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식품을 개발한다.

기존 베스트셀러 ‘불닭볶음면’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해외 수출 확대에도 사활을 건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웃도는 10%로, 2018년부터 5년 연속 1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